

2025
지역상생·문화동행 사업
성과공유회 공유포럼



사단법인

한국지역문화재단총연합회

2025
지역상생·문화동행 사업
성과공유회 공유포럼



사단법인

한국지역문화재단총연합회

2025 지역상생·문화동행 사업 성과공유회

2025. 12. 16.(화) 14:00
충무아트센터

타임테이블

시간	구분	프로그램	행사내용
13:50-14:00	1부	등록	참석자 등록
14:00-14:10		축하공연	지역아티스트 공연(약 10분)
14:10-14:20		내빈 소개	인사말씀
14:20-14:50 (30분)		성과공유 및 발표	• 아카데미 교육 (발표: 조은실 PM) • 교류·협력사업 (발표: 조민지 PM) • 지역상생 문화동행페스타 (발표: 김비 PM)
14:50-15:00		성과 영상 상영	아카데미·지역 간 교류·문화동행페스타 하이라이트 영상 상영
15:00-15:20		성과우수사례 시상	• 아카데미교육참여 우수재단(2) • 교류·협력사업 참여 우수재단(2)
15:20-15:30	휴식		
15:30-17:00 (90분)	2부	[공유포럼] • 주제 : 지역문화재단의 현재 모습 진단과 한지총의 운영 전략 • 발제 : 정보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 좌장 : 백옥선 (전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회장)	• 소홍삼 (서울관악문화재단 대표이사) • 김종길 (경기문화재단 정책실장) • 박소윤 (부산문화재단 정책기획센터장)
		• 제언 및 토론 (예시) - 기초 및 광역문화재단의 협력과 상생을 위한 연대 방안 - 지역문화 재원확충, 인력전문화 및 지역문화 관광의 융합 등 - 한국지역문화재단총연합회 (한지총)의 법제화 필요성 - 기타 지역문화재단의 현안과제 및 한지총의 역할에 대한 제언 • 객석 질의 및 종합토론	
17:00	-	• 폐회	참석자 간담회(인근 식당)

목차

좌장 | 백옥선 (전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회장)

발제

지역문화재단 현황과 한국지역문화재단총연합회 발전방안

정보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제언 및 토론

지역문화재단 지속가능성의 열쇠, '협력' & '사람'

소홍삼 (관악문화재단 대표이사)

전달 체계를 넘어 거버넌스 주체로

김종길 (경기문화재단 정책실장)

지역문화재단의 현재 진단과 한국지역문화재단총연합회 운영 전략

박소윤 (부산문화재단 정책기획센터장)

종합토론



좌장 | 백옥선

전북도청 전문직 사무관

전 전주문화재단 대표

전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장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 박사

지역문화재단 현황과 한국지역문화재단총연합회 발전방안



정보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학력_홍익대학교 경영학 박사

경력_2015~현재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지역문화학회 학술부위원장, 한국문화경제학회 학술이사, 한국예술경영학회 대외 협력이사,

한국지방재정학회 이사, 한국문화여가학회 대외협력이사, 한국문화산업학회 이사

2023~현재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단 평가위원(제16기, 17기, 제18기)

2020~현재 : 기획재정부 참여예산 지원협의회 위원

저서_문화 트렌드 2026(공저), 문화 트렌드 2025(공저)

차례

- I. 지역문화재단의 역할과 연합회 필요성
- II. 지역문화재단 현황 및 쟁점
- III. 한국지역문화재단총연합회 발전방안

I. 지역문화재단의 역할과 연합회 필요성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韓國文化觀光研究院

1. 지역문화재단의 역할과 기능
2. 한국지역문화재단총연합회 출범배경
3. 한국지역문화재단총연합회 운영현황

1 지역문화재단의 역할과 기능

「지역문화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근거 설치

2014년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지원하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문화재단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타당성 검토, 심의위원회 의결, 행안부 협의(광역 단위), 조례·정관 제정 과정을 거쳐, 지자체는 투자 적정성, 주민복지·지역경제 효과 등을 공개

각 재단은 지역의 문화예술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문화를 진흥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지역 특성에 따라 비전, 목적, 사업의 영역이 다양함

지역문화진흥법

제5장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등

- 제19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그 밖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0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역민 문화예술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문화를 진흥하는 핵심기관

2 한국지역문화재단총연합회 출범배경

지역문화재단의 광역/기초 분산연합, 공동사업 법제화 필요성 대두



152개 광역·기초 문화재단 뭉쳤다...한지총 '지역상생·문화동행' 사업 스타트

광역·지역 한국지역문화재단총연합회 작년 8월 출범
지역문화 상생을 위한 발걸음으로 첫 공동사업 추진

최수문 선임기자 | 2023-06-10 16:37:20 | 문화



152개 지역문화재단총연합회 출범식이 지난 8월 서울 덕수궁 서울미술관에서 2022년 정기총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최영-송복문/한국문화재단

"전국 141개 지역문화재단의 상생과 발전"...한국지역문화재단총연합회 출범

HOME > 문화
17개 시도 광역문화재단과 132개 기초문화재단이 아우르는 통합연
초대 회장 이창기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영양망'의 소를 구축할 것

17개 시도 광역문화재단과 132개 기초문화재단이 아우르는 통합연
초대 회장 이창기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영양망'의 소를 구축할 것

서울문화재단이 초대 회장 이창기 141개 지역문화재단의 발전과 상생을 위해 지난 22일 오후 서울시청 대강홀에서 '한국지역문화재단총연합회' 출범식(좌)과 서울문화재단이 초대 회장 이창기 141개 지역문화재단 총연합회 출범식(우)이 순차적으로 열렸다.



141개 지역문화재단총연합회 출범식(좌)과 서울문화재단이 초대 회장 이창기 141개 지역문화재단 총연합회 출범식(우)이 순차적으로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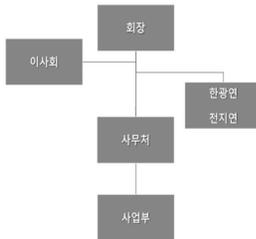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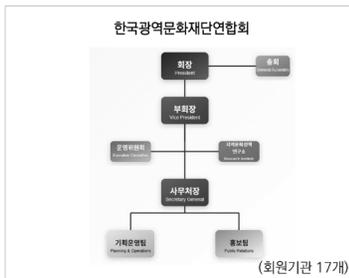
2 한국지역문화재단총연합회 출범배경

광역 단위 한광연과 기초 단위 전지연 소속 지역문화재단의 교류와 상호 협력, 24년 출범

한국지역문화재단총연합회



- 지역문화 균형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지원
-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사업 제안
- 지역문화재단에 대한 정책자료 및 정보 제공
- 지역문화재단 간 상호협력 증진 및 공동사업 발굴 및 지
- 지역문화재단 임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 국내외 문화단체와의 협력 및 문화사업 등의 교류



3 한국지역문화재단총연합회 운영현황

지역문화예술의 중심 플랫폼으로서 인재육성, 연대구축, 지식공유, 운영강화 전략

미션	문화가치의 확산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지역문화예술의 중심 플랫폼		
비전	연대로 있는 지역, 문화예술로 여는 미래		
핵심 가치	연대 (Solidarity)	혁신 (Innovation)	지속가능 (Sustainability)
전략 목표	Cultivate <small>인재육성</small>	지역문화 인재 전문화 및 육성기반 조성	
	Organize <small>연대구축</small>	지역 간 문화협력과 공동 기획체계 강화	
	Research <small>지식공유</small>	정책 기반 구축과 지식공유 플랫폼 정착	
	Enhance <small>운영강화</small>	운영체계 선진화 및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확립	
전략 과제	Cultivate <small>인재육성</small>	지역문화 인재 전문화 및 육성기반 조성 ① 지역문화 종사자 성장 지원체계 구축 ② 지역문화 리더십 역량 강화 ③ 국내외 연수 및 교류발 연계 사업	
	Organize <small>연대구축</small>	지역 간 문화협력과 공동 기획체계 강화 ① 지역 간 공동기획 사업모델 개발 ② 지역상생문화동맹 캐스터 등 전국단위 공동 행사 정례화 ③ 회원기관 협업 활성화 지원체계 확립	
	Research <small>지식공유</small>	정책 기반 구축과 지식공유 플랫폼 정착 ⑦ 정책연구 체계 및 지식공유 인프라 구축 ⑧ 공공데이터 기반 정책실적 지원 ⑨ 기초-광역 간 협력 모델 확산	
	Enhance <small>운영강화</small>	운영체계 선진화 및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확립 ⑩ 운영체계 및 거버넌스 정비 ⑪ 기관 재정 안정화 ⑫ 디지털 기반 통합 플랫폼 운영	

3 한국지역문화재단총연합회 운영현황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지역문화전문인재 육성, 지역문화 네트워크 등 통합형 사업 추진

지역문화 우수사례 시상 및 전시 구성
- 시민 참여 중심의 생활문화·퍼포먼스 프로그램 운영
- 정책포럼·라운드테이블, 전국 재단·전문가 네트워크
- 재단 직원-예술가-시민, 통합형 활동 플랫폼 구축



지역문화 종사자 아카데미 ON
- 단계별(신입-실무-중간관리자-CEO), 기능별(홍보·저작권·보조금 정산 등) 순회교육
- 전국 단위 문화종사자 통합교육체계 정착
- 재단별 수요 기반의 직무 중심 교육 구조 확립

지역 간 문화예술 교류 프로그램 운영, 협력 강화
- 기관과 예술단체 간 공동 추진 구조 마련
- 지역 예술가·주민·문화재단의 참여 기반 확대



II. 지역문화재단 현황 및 쟁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韓國文化觀光研究院

1. 지역문화재단 현황
2. 지역문화재단 쟁점

1 지역문화재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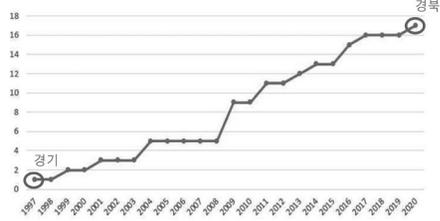
226개 기초지자체 중 143개(63.3%) 문화재단 설립, 17개 광역지자체 모두 문화재단 설립완료

1997년 경기도가 처음으로 경기문화재단을 설립
1998년 강릉시가 기초지자체 처음으로 강릉문화재단을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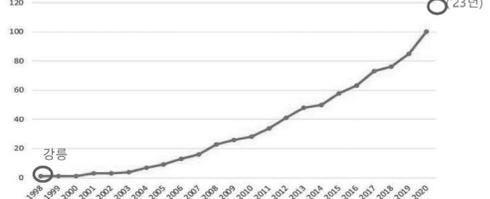
2025년 10월 기준 지역문화재단은 총 160개(광역 17개, 기초 143개)
(자료: 한국지역문화재단총연합회 내부자료)

2024년 1월 기준 지역문화재단은 총 136개(광역 17개, 기초 119개)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광역문화재단 설립추이



기초문화재단 설립추이



자료: 한국지역문화정책연구소(2020), 지역문화재단 통계 및 지표체계 개발 연구

2 지역문화재단 쟁점 : 재정 의존성과 사업 획일화

계약직 30.4%, 자체자금 9.7% · 취약한 인력 및 재정구조

지방재정 여건 악화 속에서 출연금 동결·감액, 낮은 자체자금 비중
단년도 예산 구조로 인해 장기 프로젝트 인력 투자
단기성과형 행사 위주 구조 반복

프로젝트 단위로 비정규직 비중이 높아 사업의 지속성, 전문성에 한계
지자체 위탁사업 의존으로 전문성 확장 동기 약화, 높은 이직률

문화도시, 생활SOC, 축제, 문화다양성 등
국고·광역 공모사업에 따라 유사한 사업이 전국에 확산되면서,
지역 고유성보다 표준화된 패키지 프로그램이 늘어나는
'내용의 획일화' 문제가 제(김용진, 전조우, 2023)

지역문화재단 인력현황(2024.1월기준)

구분	인력 현황(명)		
	계	정규직	기타 (계약직등)
광역	124,9 (100)	93,2 (74.6)	31,7 (25.4)
기초	63,4 (100)	43,3 (68.2)	20,1 (31.8)
전체	71,1 (100)	49,5 (69.6)	21,6 (3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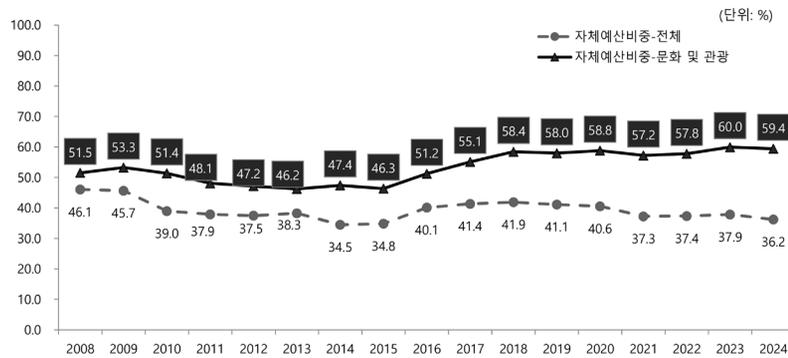
지역문화재단 예산현황(2024.1월기준)

구분	계	예산 현황(단위 : 억원)			
		지자체 보조	국고 (기금등)	자체자금	기타
광역	495.4 (100)	326.6 (65.9)	97.4 (19.7)	42.1 (8.5)	29.3 (5.9)
기초	99.9 (100)	73.6 (73.7)	5.9 (5.9)	10.5 (10.5)	9.8 (9.8)
전체	149.3 (100)	105.3 (70.5)	17.4 (11.6)	14.5 (9.7)	12.2 (8.2)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연구자 재구성

2 지역문화재단 쟁점 : 인력 전문성과 기획력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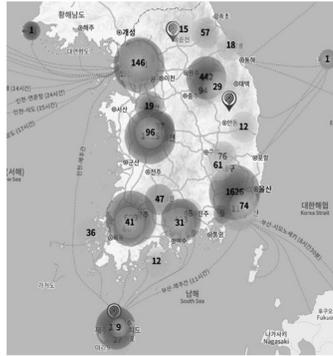
지역의 문화재정 자율성 개선 = 지역문화재단 자체사업 요구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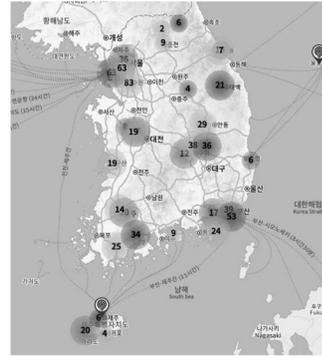
주 1) 본예산, 순계기준
주 2) 총지출 = 정책사업(보조사업+자체사업)+재무활동+행정운영경비
자료: 행정안전부(각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상)

2 지역문화재단 쟁점 : 지역 내 경쟁구도

지역민 문화향유 지원 문화기관 증가, 지역 내 경쟁구도 형성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문학관 현황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생활문화센터, 지역문화재단 현황

자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자원지도 https://arc.arte.or.kr/ap2/map_kakao.do

Ⅲ. 한국지역문화재단총연합회 발전방안

1. 정책적 요구사항(환경변화)
2. 한국지역문화재단총연합회 조직운영 안정화 방안
3. 한국지역문화재단총연합회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1 정책적 요구사항(환경변화)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표방, 중간지원조직으로써의 한지층 역할 요구

2020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분권 역량 제고
별면부

- **과제목표**
 - 국가·지방 및 중앙-기초간 협력 체계 구축, 지방자치권 강화 및 주민자치 활성화, 국가사무 지방이양 등으로 역할 확장 확대
- **주요내용**
 - **중앙-지방 협력체계 구축** 지역 관련 회고의사결정기구로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국가차시분권회의로 개편하고 개헌을 계기로 헌법상 기구로 격상
 - **자치입법권 강화** 조례로 위임한 내용을 행정규칙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개헌을 계기로 폭넓은 자치입법권 보장
 - **지방의회법 개정** 지방의회 조직·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의회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등을 확대하여 지방의회의 역할·책임 강화
 - **주민자치권 확대** 주민자치회 법적 근거 마련, 주민 선택 읍·면·동장 임용제 시범 실시, 주민소환제 개선,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 마련 등 읍면의 민주주의 강화
 - **권한이양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는 (가칭)「제3차 지방입법·이양법」 제정 및 지역별 맞춤형 권한이양 등 추진
- **기대효과**
 - 자치권의 실질적 보장을 통한 지역의 특색에 맞는 자율적 정책 시행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 주민·지역 주도의 분권정책 추진으로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창의성과 다양성을 실현

-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 지역 맞춤형 문화기획

104 전 국민이 누리고 세계인과 소통하는 K-컬처
문체부

- **과제목표**
 - 국민 문화 향유 확대에 문화예산연관률 7%(2019) 달성(2021 6%)
 - 전통문화·인어·예술 등 K-컬처 산업이 1위는 한국문화의 해외 확산 및 국가유산 보존·전승
- **주요내용**
 - **문화국가 정책인프라 마련** 문화정책·산업 전략 수립, 국제 문화타라다를 위한 위원회 설치, 문화재정 대폭 확대
 - *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설치 추진
 - **일상 속 문화향유·참여 확대** 통영문화이음원* 확대, 생애주기 독서 활동 지원 확대, 꿈의 예술단* 등 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 역량 개발
 - * 생애주기의 문화예술 경험, 체험활동 지원금
 - **문화로 지역성장**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문화신도신단 신청 및 프로그램 지원 확대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거점형 문화시설 조성
 - **전통·유산 보존 및 가치확산** 전통사찰 등 자연유산에 대한 인프라 확충, 무형유산 전승자 발굴·집중 육성, 국가유산 유네스코 등재 확대
 - **글로벌 K-컬처 확산** K-아트·한국어·전통문화 등 해외 진출 지원, 개발도상국 세계유산 조사·보존, 문화예술교육 등 교류 추진, K-컬처 해외 네트워크 고도화*
 - * 새해맞이 확대, 해외문화교류 거점 코리아센터 확충
- **기대효과**
 - 문화정책 인프라 강화로 일상 속 문화 향유를 통한 삶의 질·국민 만족도 향상
 - K-컬처의 세계 확산·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문화역량 강화 및 글로벌 문화강국 위상 제고

2 한국지역문화재단총연합회 조직운영 안정화 방안

운영안정화를 위한 재원개발

네트워크 조직은 정책서비스를 직접 지원하기보다 관계 조직의 활동을 조정 및 촉개하는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정부지원(국고보조금)으로 운영하는데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운영안정화를 위한 재원개발 필요

(재원개발 방안예)
회비모금, 후원금 개발, 기금설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업 소개

협회 소개	조직소개	국립협회	교차운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소개	의사결정체	지역협의체	국립협회	지역복지재단
조직소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원가입방법

- 01 신청서 작성 및 접수 (Form: Application Form)
- 02 신청서 접수 후 심사 및 승인
- 03 후원금 입금 및 가입 완료
- 04 후원금 수령에 따른 영수증 발급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대표사업으로 푸드뱅크를 운영하면서 지난 8년 기간동안(2012~2020년) 기부총량 2조원을 달성하였고,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고향사랑펀드를 활성화하는 등 기부유도를 위한 사업을 적극 확장

2 한국지역문화재단총연합회 조직운영 안정화 방안

의사결정 과정의 개방성, 운영의 투명성 확보

협약회의 위상과 역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협약회에 참여하는 임원진이 지역사회 내외적으로 리더십이 있는 인사이자 다양한 이해관계(기관, 시설, 단체, 회원 등)의 협력과 갈등 해결 역할 중요

협약회의 역할은 구성원들을 통제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아닌 네트워크의 제반 활동이 잘 이루어지도록 촉진하고 지원하는 데 있으며, 참여기관(협약회 단체 및 기관)간의 역할과 운영원칙 마련 필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례



구분	명칭(기·번)	명칭(기·번호)	명칭(기·번호)
총괄	사회복지위원회	지역사회보장위원회	지역사회보장위원회
합동기구	지역사회보장 협의회	지역사회보장 협의회	지역사회보장 협의회
목적	- 지역사회보장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민간	- 공동 거점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	- 지역사회보장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민간
개	사회복지위원회	지역사회보장위원회	지역사회보장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의 일반 원칙은 **지역성, 참여성, 협력성, 통합성, 연대성, 예방성** 등 6가지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요기능은 **협치, 연계, 통합** 3가지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과정·평가 등에 민관이 협력하여 심의·자문,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 제공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 강화, 협의체 내 분과 간 통합 및 조정과 지역주민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 제공체계 지원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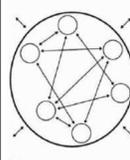
3 한국지역문화재단총연합회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이해관계자 간 조정 및 촉진자 역할, 목표합의 및 네트워크역량 수준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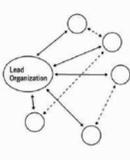
Provan and Kenis(2008)는 중재의 정도와 네트워크 관리기구의 외부성 여부를 기준으로 네트워크의 형태를 참여자배형, 주도조직 지배형, 네트워크 행정조직형 등 세 가지로 구별

한국지역문화재단총연합회 네트워크 형태는 **네트워크 행정조직형**에 가까움

Self Governed Network



Lead Organization Network



Network Administrative Organization



○ Network members that are collectively involved in network governance
 — Stronger relationship
 - - - Weaker relationship

출처: Provan & Kenis (2008)

구분	참여자배형 shared governance	주도조직배형 lead organization	네트워크행정조직형 network administrative organization(NAO)
신뢰	높은 밀도	낮은 밀도, 높게 검증됨	중간적인 밀도, 회원이 NAO를 모니터링함
참여자 수	적음	보통	적당히 많음
목표합의	높음	적당히 낮음	적당히 높음
네트워크수준 및 주요역량 요구	낮음	보통	높음

3 한국지역문화재단총연합회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지역문화 구심축으로서 위상 확립을 위해 조정자 역할 강화

중간지원조직은 정부와 민간 간 그리고 조직 간 활동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

조정자 역할은 전국단위를 연계 협력할 수 있는 기반으로 표준화된 시스템 구축, 품질보증, 심의·자문·평가 등의 기능을 의미함

(조정자 역할 강화 방안 예)

지역문화재단 교육 및 훈련, 전문가 연계 등으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나아가 시도 및 시군구 단위 네트워크를 포괄하는 지역 내 주민 수요 발굴, 지표관리(데이터) 등을 법적 기능화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례

조사연구	국제협력	교육훈련	사회복지중진
미디어홍보	지역협력회 육성	복지넷	자원봉사인증
푸드뱅크	사회나눔실천	사회공헌엔디	나눔사업
연보봉사사업	좋은이웃들	케어뱅크	사랑봉사봉사사업

조사연구

▶ 조사연구
 전문 연구 수행과 더불어 정책, 사회복지기능단체, 사회복지시설, 환경실무자와 긴밀히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심도자문 등을 개최해 복지사업 조성 및 민간복지 생태계 구축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사연구	국제협력	교육훈련	사회복지중진
미디어홍보	지역협력회 육성	복지넷	자원봉사인증
푸드뱅크	사회나눔실천	사회공헌엔디	나눔사업
연보봉사사업	좋은이웃들	케어뱅크	사랑봉사봉사사업

교육훈련

▶ 교육훈련 사업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05조(교육훈련)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기타 사회복지관련법령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인력교육 등 필요한 지도와 훈련을 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20조(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업무)
 •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원의 교육훈련과 복지중진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지자체에 컨설팅 지원, 자문, 연구 및 조사기능을 강화, 고유목적사업을 법률 상 명문화함



지역문화재단 지속가능성의 열쇠, ‘협력’ & ‘사람’

소홍삼 | 관악문화재단 대표이사

관악문화재단 대표이사
前) 의정부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음악극축제·블랙뮤직페스티벌 총감독
저서_무대의 탄생(2013), 축제의 탄생(2021), 더 프로듀서(공저, 2022)



지역문화재단을 둘러싼 내·외부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지방소멸의 가속, 도시 기능의 재편, 문화소비 방식의 변화, 그리고 문화·관광·도시정책의 융합 등 지역문화의 외부 요인은 재단의 역할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한다.

한편, 내부적으로는 재원의 한계, 전문 인력 부족, 정책의 파편화, 그리고 문화·관광의 통합 흐름에 따른 정체성의 재정립, 문화도시사업이 남긴 ‘빛과 그늘’ 등 여러 과제가 동시에 존재한다. 이번 토론에서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몇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지역문화재단의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진화의 가장 능숙한 설계자, ‘협력’

지역문화정책은 개별 재단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과제가 많다. 특히 최근 지자체 재정 여건의 악화로 지역의 독자적인 문화정책 환경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문화재단 간의 협력사업은 지역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살리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문화예술기관들의 상호 네트워킹과 협력체계는 문화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활용도를 증대하는 기반이며, 문화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략이다. 특히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광역과 기초문화재단 간 협력과 상생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광역은 정책 데이터 기반의 전략 제시, 지자체와의 공동 정책 모델 개발, 광역-기초 간 정책 조율 기능 강화와 전략적 지원 그리고 연구-거버넌스를, 기초는 실천단위로서 문화향유 제공과 생활문화기반 등의 실행력을 담당하게 된다. 하지만 문화정책이 고도화되면서 광역단체만으로는 정책 추진의 효과성을 높이기 어렵기 때문에 광역과 기초가 함께 설계하고 실행방안을 모색하는 수평적 구조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더 다양한 공동기획, 공동예산, 공동마케팅, 공동 인력교육 등 서로의 힘을 보완하는 수평적 연대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광역과 기초의 연대 없이 지속가능성은 없다.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며, 지속가능한 지역문화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에너지이다.

사업보다 ‘사람’이 먼저

지역의 문화정책과 사업이 지속 가능하려면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어느 재단을 보더라도 잦은 이직, 과중한 업무,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관료적 조직문화, 단기 프로젝트 위주의 사업 운영, 재단 내의 순환 보직 등으로 내적 동기부여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젊은 직원들의 빈번한 이직과 퇴사 등의 약순환이 반복되고 있고, 점점 더 무기력한 조직풍토가 확산되고 있다. 인력의 전문화 이전에, 전문 인력이 오래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먼저다. 좋은 인력이 오래 머물고, 경험이 해당 지역에서 축적될 때 문화정책과 지역문화의 질 또한 향상될 수 있다. 지역문화의 질을 좌우하는 것은 시스템이 아니라 결국 사람이다.

‘리더십’ 리스크

지역문화재단의 경우 문화가 지닌 암묵지(tacit knowledge)적 특성 때문에 대표의 역량과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많은 지역문화재단에서 전문성과 무관한 기관장 임명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정치적 임명 구조가 강화되면서 기관의 정체성과 정책 방향성도 매번 출렁거린다. 그 결과 단기 성과 중심의 사업이나 특정 이해관계에 따른 사업 추진, 중장기 전략의 부재, 조직 신뢰도 저하 및 조직문화 붕괴, 인력 이탈 가속, 기존 사업의 중단과 취소·축소, 조직의 기획력과 전문성 약화로 이어지는 사례들을 너무 흔하게 목도하게 된다.

대표 임명에 대한 전문성 기준 강화, 추천·심사 절차의 투명성, 실효성 있는 기관장 평가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좋은 리더십은 재단을 전략적으로 이끌지만, 잘못된 리더십은 재단뿐 아니라 한 지역의 문화생태계를 순식간에 뒤흔들 수 있다.

문화와 관광 그리고 ‘정책’

지역의 문제는 단일 정책 영역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지역의 문화·관광·도시재생·교육·환경 등 정책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 특히, ‘지역문화+관광재단’의 확대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인 듯하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에 대응하며 ‘관계인구’를 늘리기 위한 현실적 대응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문화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문화와 관광의 시너지적 융합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통합조직 내부에서도 역할 중복과 전략이 부재하고, 관광 중심 성과지표에 치우치기도 한다. 문화의 본질을 기반으로 관광을 설계하고, 관광의 단기 성과와 문화의 지속성을 균형 있게 관리해 나가야 한다.

관광은 도시계획과 연결되며, 도시계획은 다시 삶의 질과 지역 정체성으로 확장된다.

따라서 지역문화재단은 단순히 사업을 수행하는 실행 기관이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정책을 연결하고 통합하는 전략 정책 기관으로서 역할을 확장해야 한다. 지역문화재단이 정책을 읽고, 정책을 만들고, 정책을 연결하는 정책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할 때 비로소 지역의 문화·관광·도시 전략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 지역문화재단이 정책적 관점과 역량을 갖출 때 더 이상 ‘행사수행기관’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핵심적인 문화정책·전략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전달 체계를 넘어 거버넌스 주체로

- 한지총이 나아가야 할 5가지 정책 의제

김종길 | 경기문화재단 정책실장

1968년 전남 신안. 국민대 대학원에서 미술이론 박사과정 수료. 모란미술관 학예연구사, 경기문화재단 전문위원/문예진흥실장,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관장, 경기도미술관 수석큐레이터, 경기천년 도큐페스타 전시감독, DMZ아트프로젝트 전시감독 역임. 현재 경기문화재단 정책실장. 한국미술평론가협회 신인평론상, 김복진미술이론상, 올해의 큐레이터, 월간미술대상 장려상(전시기획) 등 수상.



한국지역문화재단총연합회(이하 한지총) 출범 1주년을 맞아, 통합의 의의와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주신 정보람 연구원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특히 발표자료에서 한지총의 출범 배경으로 '중앙정부와의 소통 비효율 개선'을 꼽아 주신 점에 깊이 공감하며, 이를 바탕으로 첫 번째 토론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1. 대정부 거버넌스의 재정립-사업 수행 파트너를 넘어, 대등한 정책 협상 파트너로

쟁점. '전달 체계'로서의 한계를 답습할 것인가?

그동안 지역문화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사업을 지역에 실어 나르는 '말초신청' 혹은 '하부 실행 기관'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중앙에서 예산과 지침(Top-down)이 내려오면, 지역은 이를 수행하고 정산하는 수직적 위계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발표에서 언급된 '소통의 비효율'이 단순히 행정 절차의 간소화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통합 연합회의 출범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지총이 또 하나의 거대한 사업 수행 기관이 된다면, 이는 '대정부 소통 창구'가 아니라 거대해진 '하청 구조'의 완성일 뿐입니다.

토론. '협력'을 넘어선 '협상(Negotiation)'의 주체로

한지총의 위상이 '사업 파트너'가 아닌 '대등한 정책 협상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정책 거버넌스의 정례화'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간담회 수준을 넘어, 문체부 및 기재부와 예산, 인력 가이드라인, 법제도 개선을 논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협의체(Table)가 필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도 사실 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는 바텀업(Bottom-up) 구조였거나, 함께 구상했어야 합니다. 둘째, '교섭 단체로서의 기능 강화'입니다. 지역문화재단 종사자들의 처우 문제나 불합리한 예산 편성 지침에 대해, 개별 재단은 목소리를 내기 어렵습니다. 한지총은 모든 문화재단들을 대표하여 중앙정부를 상대로 표준 임금 체계와 운영비 국비 지원 등을 요구하고 관철시킬 수 있는 '협상력'을 가져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한지총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많은 사업을 벌이느냐가 아니라,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얼마나 수평적으로 재편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만행 격인 우리 경기문화재단이 생각하는 한지총의 첫 번째 과제입니다.

#2. 역할 정립 ‘선수’가 아닌 ‘심판’이자 ‘플랫폼’으로

한지총의 네트워크 활성화 및 운영 방안으로 ‘2025 지역상생 문화동행 페스타’ 개최, ‘지역문화 종사자 아카데미’, ‘지역 간 문화예술 교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통합 원년을 맞아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 주고자 하는 의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정책적 관점에서는 우려되는 지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쟁점. 연합회가 ‘선수’로 뛰는 것의 위험성

가장 큰 쟁점은 “왜 연합회가 개별 재단들이 수행해야 할 ‘선수(Player)’의 영역에 들어오려 하는가?”입니다. 발표에서 언급된 ‘페스타(축제)’나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은 이미 전국의 지역문화재단들이 각 지역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수행하고 있는 고유 업무입니다. 연합회가 별도의 축제를 개최하고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회원사들의 업무 영역과 중복될 뿐만 아니라 자칫 ‘옥상옥(屋上屋)’의 비효율을 낳을 수 있습니다. 한지총의 예산과 행정력이 이러한 일회성 행사나 보여주기식 사업에 투입된다면, 정작 연합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시적인 업무들은 뒷전으로 밀리게 됩니다. 연합회는 지역재단들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운동장을 닦아주는 조직이어야 합니다.

토론. ‘판을 깔는’ 매개자(Mediator) 역할

한지총의 역할은 직접 사업 수행이 아닌, ‘판을 깔아주는 매개자’ 역할이어야 합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한지총에게 필요한 ‘진짜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제교류 및 전국적 네트워크의 허브’ 기능입니다. 개별 기초재단이 독자적으로 해외 유수의 기관과 교류하거나, 전국 단위의 거대 담론을 형성하기는 어렵습니다. 한지총은 이러한 개별 재단의 한계를 보완하여, 국제적인 문화예술 교류의 물꼬를 트고 전국을 아우르는 광역 네트워크의 거점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둘째, ‘전문인력 교류 시스템(Exchange System)’의 구축입니다. 단순히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넘어, 광역과 기초, 도시와 농촌 재단 간의 실질적인 ‘인력 파견 및 교환 근무제’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노하우가 흐르게 하고, 인적 자원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축제 한 번 더 여는 것보다 훨씬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셋째, ‘정책 이슈의 인큐베이터’ 역할입니다. 기후 위기, 디지털 전환, 지역 소멸 등 개별 지역이 감당하기 힘든 거대 의제에 대해 한지총이 선제적으로 연구하고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문화재단에 보급해야 합니다. 요컨대, 한지총은 ‘사업을 하는 조직’에서 ‘시스템을 만드는 조직’으로 진화해 가야 합니다. 이것이 1주년을 맞은 한지총이 가져야 할 진정한 역할 정립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3. 정책 기능의 고도화-국가와 지역을 잇는 ‘정책 컨트롤 타워’로

세 번째로 제안하고 싶은 부분은 한지총의 핵심 존립 근거이기도 한 ‘정책 기능(Policy Function)’의 방향성입니다. 발표자료를 보면, 한지총의 주요 운영 현황으로 ‘정책포럼·라운드테이블’ 개최와 ‘이슈리포트 발간’ 등을 꼽고 있습니다. 물론 담론을 형성하는 장(場)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1주년을 맞은 현시점에서 한지총의 정책 기능이 과연 ‘토론’을 넘어 실질적인 ‘입안(Making)’과 ‘변화(Impact)’로 이어질 수 있는지 냉정하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쟁점. ‘탑다운(Top-down)’ 방식의 정책 수용자에서 벗어나야

발표자료에서 언급된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이라는 시대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중앙의 공모사업 지침에 따라 사업의 색깔을 맞추는 일이 빈번합니다. 한지총이 단순히 포럼 몇 번 열고 자료집을 내는 것에

그렇다면, 이러한 수직적 정책 결정 구조는 절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연구 기능’이 아니라, 중앙의 논리를 지역의 언어로 재해석하고 방어해 낼 ‘정책적 전투력’입니다.

논점. ‘바텀업(Bottom-up)’ 정책 제안을 위한 컨트롤 타워

한지총이 명실상부한 ‘지역문화 정책 컨트롤 타워’로서 다음과 같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주문합니다. 첫째, 중앙정부 기본계획 수립의 ‘선제적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계획이 발표된 뒤에 대응하는 것은 늦습니다. 차기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한지총이 TF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합니다. 문화재단들의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역이 진짜 필요로 하는 아젠다를 추출해 정부 계획에 ‘역(逆)제안’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거버넌스입니다. 둘째,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모델’ 개발입니다. 발표자료의 지도에서 보듯, 인구 소멸 위기를 겪는 군 단위 기초재단과 거대 광역재단이 처한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지침이 지역의 특수성을 해치지 않도록, 한지총이 앞장서서 ‘도시형’, ‘농촌형’, ‘도농복합형’ 등 유형별 맞춤 정책 가이드라인을 연구하고 이를 정부 예산 편성에 반영토록 요구해야 합니다. 셋째, ‘데이터 주권(Data Sovereignty)’ 확보입니다. 발표자료에 제시된 각종 통계와 지표 관리 기능을 법적 기능화하겠다는 계획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다만, 이 데이터가 단순한 실적 집계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역 문화재단들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가치를 정량적·정성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고유 지표를 개발하여, 기재부나 지자체 예산 담당 부서를 설득할 객관적 무기로 삼아야 합니다. 결국 한지총의 정책 역량은 얼마나 화려한 포럼을 여느냐가 아니라, 회원사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얼마나 실질적으로 걷어내 주느냐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4. 인력 및 조직 역량의 혁신-교육(Education)을 넘어 구조(Structure)로

(전문인력 교류와 처우 개선 가이드라인)

문화재단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사람(Human Resources)’에 관한 문제입니다. 발표자료의 <지역문화재단 쟁점> 부분을 보면, 우리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전체 인력 중 비정규직(계약직 등) 비율이 약 30.4%에 달하고, 프로젝트 단위의 단기 고용 구조로 인해 직업 안정성이 매우 취약합니다. 이에 대한 발전방안으로 연합회는 ‘직급별·직능별 순회 교육’과 ‘통합 교육 체계 정착’을 제안하였습니다. 물론 직무 교육은 필요합니다. 현장을 지켜본 실무자로서, “과연 교육 프로그램 몇 번 듣는다고 떠나는 인재를 잡을 수 있으며, 구조적인 전문성 부재가 해결될 수 있을까” 고민됩니다.

쟁점. 교육의 부재가 아닌, ‘전망’의 부재

지역문화재단 종사자들이 현장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배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입니다. 발표자료에서 지적한 대로 잦은 이직과 전문성 축적의 한계는 낮은 임금, 불투명한 승진 체계, 그리고 지자체의 과도한 행정 간섭에서 기인합니다. 근본적인 ‘고용 구조’와 ‘처우’를 개선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교육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공산이 큼니다.

논점. ‘인사 교류 시스템’과 ‘표준 가이드라인’의 도입

한지총이 단순한 ‘교육 기관’이 아닌, ‘문화예술 노동 시장의 구조적 개선을 이끄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보며, 다음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지역문화재단 간 전문인력 교류(Exchange) 및 파견 제도’의 도입입니다. 광역재단

은 상대적으로 인력 풀이 풍부하고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반면, 기초재단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립니다. 한지총이 중개자가 되어, 광역의 숙련된 전문가가 기초재단에 파견되어 노하우를 전수하고, 기초재단의 실무자가 광역에서 기획 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 ‘교환 근무제’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이론 교육보다 백 번 더 효과적인 현장 역량 강화 방안이 될 것입니다. 둘째, ‘문화재단 표준 직무 및 임금 가이드라인’ 제정입니다. 현재 많은 지역재단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 편성 지침이나 지자체의 일률적인 기준에 묶여, 창의적인 문화 인력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지총은 힘을 모아, 문화예술 노동의 특수성이 반영된 ‘표준 처우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권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은 개별 재단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사 시스템의 연결’과 ‘노동 기준의 정립’은 오직 연합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한지총이 문화 행정가들이 자부심을 품고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5. 재정 구조의 대전환 - ‘지방교육세’를 ‘지방교육문화세’로(인구소멸 시대, 재정의 칸막이를 없애자)

마지막으로 논의할 주제는 한지총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재정 구조(Financial Structure)’의 근본적 혁신입니다. 정보람 연구원님의 발표자료에서는 한지총의 자원 마련 방안으로 ‘후원금 개발’이나 ‘기부금 모집’을 제안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단순한 ‘모금’이 아닌, 국가 재정 운용의 틀을 바꾸는 담대한 제안(Grand Bargain)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쟁점.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재정의 딜레마

현재 대한민국은 심각한 인구 절벽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이들은 줄어들고 폐교는 늘어나고 있는데,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매년 천문학적으로 쪼개지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남는 예산을 다 쓰지 못해 고민하는 반면, 바로 옆 문화예술 현장은 예산이 없어 고사 위기에 처해 있는 ‘재정 불균형의 역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이 후원금을 걷으려 다니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시대 변화에 맞춰 ‘교육’의 개념을 확장하고, 재정의 칸막이를 과감히 허물어야 할 때입니다.

토론. ‘지방교육문화세’ 도입을 통한 90:10 재정 재설계

현행 ‘지방교육세’의 명칭과 용도를 <지방교육문화세>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학교 교육’에서 ‘생애주기 문화 교육’으로의 확장입니다. 이제 교육은 학교 울타리 안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역의 미술관, 박물관, 문예회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문화 향유 활동이 곧 ‘평생 교육’이자 ‘시민 교육’입니다. 따라서 교육세를 학교 예산으로만 묶어두는 것은 시대착오적입니다. 둘째, ‘9대 1의 배분’을 통한 문화재정의 안정화입니다. 기존 교육 예산의 90%는 학교 교육에 그대로 투자하되, 남는 잉여분의 단 10%만이라도 ‘문화’ 영역으로 돌려 <지방교육문화세>로 법제화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별도의 증세 없이도 전국의 지역문화재단은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게 되고, 이는 곧바로 지역 주민들의 문화 복지 향상으로 직결됩니다. 한지총이 해야 할 일은 기업에 후원금을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부, 행안부, 기재부를 상대로 “아이들이 줄어든 교실을 지역 주민의 문화 공간으로 채우자”는 설득 논리를 개발하고, 이 거대한 재정 개혁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문화재단을 대표하는 한지총만이 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재정 구조 혁신’이라고 확신합니다.

지역문화재단의 현재 진단과 한국지역문화재단총연합회 운영 전략

- 지역소멸·5극 3특·문화분권·문화자치 환경에서의 협력·상생 전략 -

박소윤 | (재)부산문화재단 정책기획센터장·국제학 박사

정책과 담론/문화예술 현장/사람을 연결하는 일을 하고 있다.

박사논문 지속가능발전과 도시문화정책: 부산 문화현장을 통해 본 문화다양성의 지역회복 함의, 소논문 음악 용어의 탈식민성: '번역되기'에서 '번역하기'로: 금수현의 표준음악사전을 중심으로, 신무용과 부산을 발표했으며, 예술하는 일상, 청문청담 등을 여러 저자들과 함께 썼다.



지역문화재단의 현재적 위치, 지역소멸과 정책 과부하의 교차 지점

지역소멸은 더 이상 인구 감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생활 인프라·공공서비스·문화 생태계가 동시에 약화되는 복합 위기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5극 3특 초광역 전략을 통해 국가 공간구조를 재편하는 한편, 문화정책 영역에서는 문화분권과 문화자치를 핵심 기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 현실에서 이 두 기조는 필연적인 비대칭 구조를 형성한다. 공간 전략은 초광역 단위의 선택과 집중으로 작동하는 반면, 문화자치는 기초 생활권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문화재단은 다음과 같은 이중적 부담 구조에 놓여 있다.

중앙정책의 최종 실행기관으로서 지역소멸 대응, 생활문화, 문화도시, 관광, 교육, 공동체 회복 등의 정책 과업이 집중된다. 그러나 재정·인력·조직 구조는 여전히 소규모 기초 행정 단위 수준이다.

또, 현재 정책 전달 체계는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지자체 → 지역문화재단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역문화재단의 운영 한계는 제도적으로 지자체 책임 영역에 속한다. 이와 같이 지역문화재단은 정부 정책 수행의 최전선에서 있으면서도, 정부로부터 구조 개선 지원을 받기는 어려운 제도적 한계를 동시에 안고 있다.

한지총은 구조를 작동시키는 조직

이와 같은 변화와 어려움에 직면한 지역재단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재단 연합체인 한국지역문화재단총연합회(한지총)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① 초광역 전략의 구조적 부작용을 보정하는 역할

초광역 중심 전략이 기초·소멸 위험 지역을 정책적으로 배제하지 않도록, 지역 유형별 여건을 전국 단위에서 구조화하고 정책 설계에 반영하는 완충·보정 역할을 해야 한다.

② 문화분권·문화자치의 '실행 조건'을 정책 기준으로 정립하는 역할

재정, 인력, 사업 구조를 포함한 문화자치 최소 실행 조건을 전국 단위 모델과 기준으로 정리하여 정책 테이블에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③ 중앙-지방-현장 간 정책 번역자 역할

중앙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지점, 지자체 행정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실행 장애를 정책 언어로 재구성하고 조정하는 중간 정책 매개 역할을 해야 한다.

④ 지역문화 정책의 중장기 구조 전환을 주도하는 역할

재원 다각화, 인력 전문화, 통합형 사업 추진, 지역생활 기반 문화정책 등 개별 재단이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 전환 과제를 전국 단위에서 축적·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와 같이 한지총이 단순히 회원 재단을 대표하는 연합체를 넘어, 초광역 전략과 문화자치가 동시에 작동하는 시대의 구조 보정자이자 실행 촉진자로 전환될 때, 각 지역문화재단은 지역 희생과 문화자치의 핵심 공공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문화 재원 확충과 인력 전문화

문화분권과 문화자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재정과 인력 구조의 병행 전환이 필수 조건이다. 그러나 현재 다수의 지역문화재단은 다음과 같은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지자체 출연금 중심의 단일 재원 구조, 단년도 예산 편성에 따른 중장기 문화전략 수립의 어려움, 공모사업 대응 중심의 사업 종속 구조, 프로젝트 단위 인력 운영에 따른 전문성 축적의 한계가 그것이다.

이 구조에서 문화자치는 형식적 권한 이양에 그치고, 실질적 실행력은 지속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향후 한지총 차원의 인력 전문화 전략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

지역문화재단의 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재원 다각화 모델 발굴, 실무·중간관리·정책기획·광역협력까지 아우르는 다층형 인력 전문화 체계 구축이다.

이는 개별 재단이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이며, 한지총이 집합적 기준과 정책 모델로 정리해 국가·지자체 정책 구조에 반영되도록 중개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데이터 플랫폼

문화자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단순한 사업 집행이 아니라, 지역 스스로가 자기 지역을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는 권한, 즉 해석 주권이 필요하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수단이 바로 데이터다.

지금까지의 문화 데이터는 주로 예산 규모, 시설 수, 프로그램 운영 횟수, 관객·참여 인원과 같은 행정 중심 지표에 머물러 왔다. 그러나 문화자치 관점에서는 다음과 같은 데이터가 더 중요해진다.

지역 내 창의 인력의 이동, 청년 문화 인력의 체류 지속성, 생활문화 네트워크의 밀도, 문화 기반 창업의 실질 성과 같은 것들이다.

이러한 지역문화 관련 데이터 플랫폼이 갖춰지고 지역 간 연동될 수 있다면, 한지총의 '구조를 작동시키는 기능'은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04624] 서울시 중구 퇴계로 226, 복조빌딩 501호
T. 02.2055.1444 F. 02.852.2814